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84
----------	------

발의연월일 : 2024. 8. 1.

발 의 자 : 서영교 · 윤준병 · 박홍배
임오경 · 이기현 · 강유정
조 국 · 한정애 · 위성곤
박해철 · 조인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지원기간이 최대 12개월을 넘을 수 없는바, 긴급지원 종료 후에도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그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개정함(안 제6조).
- 나.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함(안 제13조).
- 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신청, 지원결정, 지원기간, 지원종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삭제).
- 라.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신용·보험·금융에 관한 정보를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마. 제3장의2를 신설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 신설).
- 바.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

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23조).

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아.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함(안 제27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가족부차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2.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

제14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을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된”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을 “금융정보등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를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로, “신용정보·보험정보를”을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을 “금융정보등의 동의, 제공

요청”으로 한다.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제3장의2(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양육비 대지급

제21조의6(양육비 대지급)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지급의 신청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대지급 결정의 통지 방법 및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대지급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7(양육비 대지급 종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대지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대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대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21조의6에 따른 대지급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

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의9(양육비 대지급금의 반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대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지급 양육비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1조의6의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2.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권리의 보호)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제2호 본문 중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를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비 선지급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행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u><신설></u> <u>5.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u>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u>여성가족부차관</u> 이 된다. ③ ~ ⑤ (생략)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⑤ (생략)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제6조(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의 결정</u> <u>6. 위원회의</u> ----- ----- ----- ----- ② ----- ----- ----- <u>여성가족부장관</u> -----. ③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17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업무를 수행한다.

1. ~ 3. (생략)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 10. (생략)

⑦ · ⑧ (생략)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 또는 양육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초본의 교부를 요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6에 따른 양육비 지급

5. ~ 10. (현행과 같음)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2.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신 설>

② (생 략)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근무지에 관한 정보자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의2(긴급지원 종료 등)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삭 제>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긴급지원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삭 제>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다.

제14조의4(비용환수) ① 이행관리

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
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
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
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 양
육비의 반환 기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 ① (생 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
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
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
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
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삭 제>

제16조(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
에 관한 조사) ① (현행과 같
음)

②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7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신설>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지급된-----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2)

를」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
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
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제공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한시적 양육비
가 지급된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보험정보를 요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
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금융정보등을

-----.

제21조의6에 따라 양육비가 지
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
정보등을-----.

③ 제2항에-----

-----.

④ 제3항-----

-----.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⑤ 제2항 및 제3항-----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금융정보등의 동의, 제공 요청-----
-----.

제3장의2 양육비 대지급

<신 설>

제21조의6(양육비 대지급) ① 제1

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이하 “대지급”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지급 신청을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대지급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④ 대지급의 신청 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대지급 결정의 통지 방법 및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대지급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대지급을

<신 설>

<신 설>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의7(양육비 대지급 종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대지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대지급의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알려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8(대지급 결정에 대한이의신청) ① 제21조의6에 따른 대지급에 관한 여성가족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가

<신 설>

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양육비 채권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의9(양육비 대지급금의 반환)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대지급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반환을 면제하거나 반환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 ① . ② (생략)
<신 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을 금액을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 반환받고, 양육비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지급 양육비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은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에 대하여 제출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1.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1조의6의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
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업무를 이행관리원에 위
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3. 제16조에 따른 양육비 채무
자의 재산 등 조사에 관한 사
항

4. 제17조에 따른 금융정보 등
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의
파기에 관한 사항

4. · 5. (현행과 같음)

6. 제21조의3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제21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에 관한 사항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제21조의5에 따른 명단 공개
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권리의 보호) 제21조의
6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에게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

-----.

② -----

-----.

1. (현행과 같음)

2.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이행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양육

<p><u>비 대지급금을 받게 한 자는 1</u> <u>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u> <u>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u> <u>한다.</u></p>
--